



## 한삼희 | 前, 조선일보 수석논설위원

- 現 환경칼럼니스트  
- 2003년~ , 조선일보에 ‘한삼희의 환경칼럼’ 연재 중
- 現 한국수력원자력 정책자문위원
- 前 조선일보 선임논설위원
- 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

# CBAM을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

한삼희 전 조선일보 선임논설위원

# 기후 문제는 본질적으로 윤리성 내포

(가해자, 피해자의 분리)

시간적 분리: 선조는 가해자, 후손 피해자 → sustainable development

**SD**가 해소 원리

공간적 분리: 선진국 가해자, 후진국 피해자

→ Common,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**CBDR**

CBDR 원칙은 **1992년 기후협약** article 3에 명시

**1997년 교토의정서** Annex I의 선진 38개국만 의무 감축 부여

그후 중국 등 개도국 그룹 경제 급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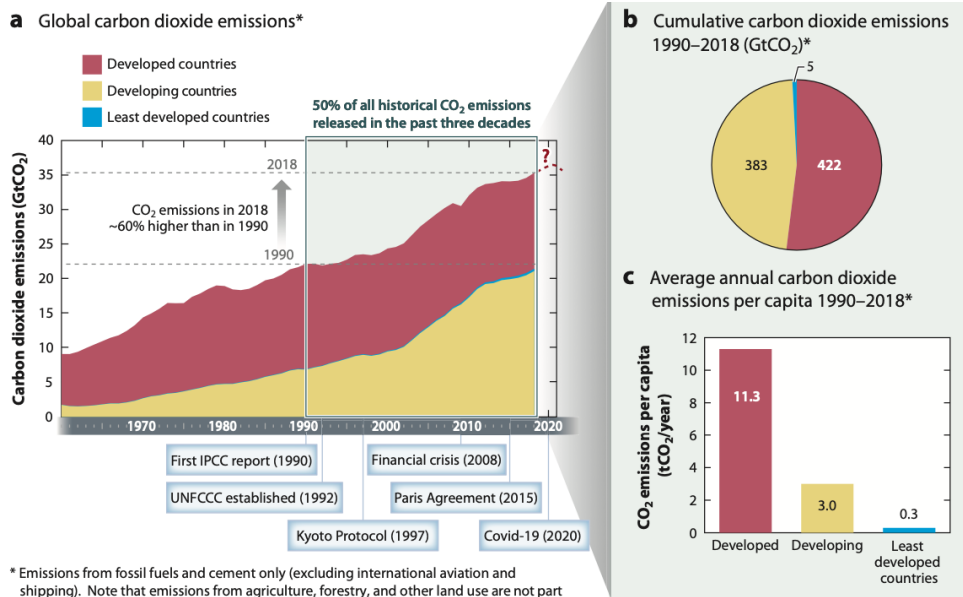
**2015년 파리협약**의 NDC형 규제 등장 → 모든 국가 참여

단 목표 수준 자기 결정 원리 / 선진국 강하게, 개도국 약하게

2030까지 유럽은 55%, 미국 50% 감축

반면 중국은 '2030 전 피크', 인도 'emission intensity 45% 감축'

# “더 이상 선진국이 운전대에 앉아 있지 않다”



Three Decades of Climate Mitigation: Why Haven't We Bent the Global Emissions Curve?, Annual Reviews of Environment and Resources, 2021.6 / \*Developed Countries= Annex I, Developing Countries = non-Annex I (인구 84% 비중)

미국 배출량 1992~2022년 5% 감소, EU 32% 감소

중국 30년 새 27억톤 → 119억톤, 4.4배(비중 12.1% → 31.5%)

바츨라프 스미 "중국 자동차 소유 1999~2019년 100배, 에어컨은 400배"

"30년 전, 중국이 오늘날처럼 되리라 내다본 사람 아무도 없어"

# 세계는 2개의 '미래 중국'을 또 갖고 있다



<OWID>

중국 인구 14.2억, 1인당 8.4톤(2023), 연간 119억톤(세계 비중 31.5%)

인도 14.4억, 2.1톤, 30.6억톤(8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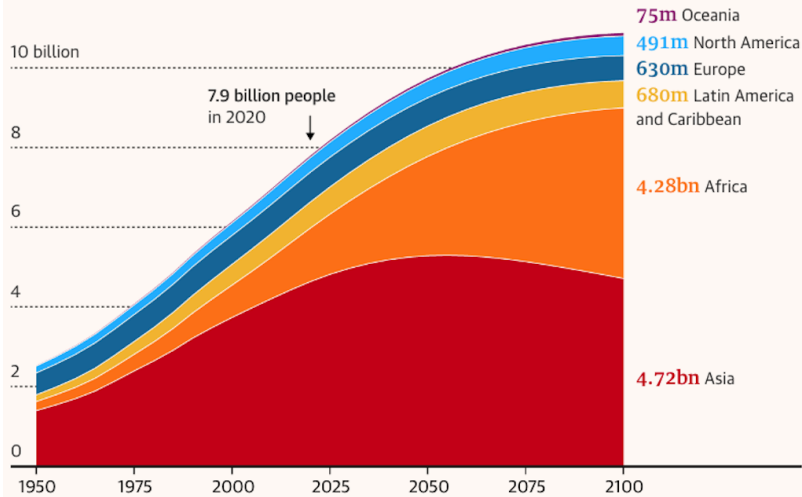
아프리카 14.8억, 1.0톤, 14.2억톤(3.8%)

인도, 아프리카에겐 제2의 중국, 제3의 중국 되는 것이 국가 목표일 것

→ 중국 배출량 지난 30년 급증. 인도, 아프리카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

# ‘young Africa’ 2100년 인구 지금의 거의 세배로

The world's population will rise to 10.9bn by 2100, with most of the growth driven by Afric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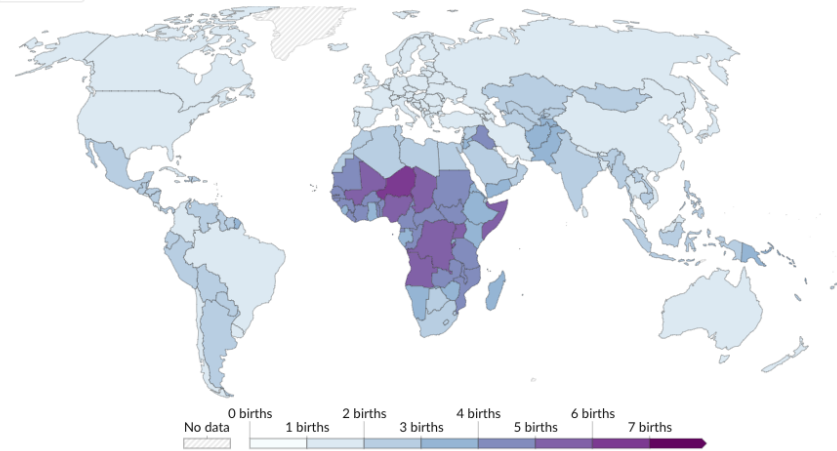


Guardian graphic. Source: United Nations

Fertility rate: children per woman, 2022

The fertility rate, expressed as the number of children per woman, is based on age-specific fertility rates in one particular year.

Table Map Chart



현재 14억에서 2050년 24억7000만, **2100년 38억1000만** 전망 (OWID)  
 → 1인당 연 배출 3톤 된다면 아프리카 배출량 100억톤 돌파

**Lancet 2020년 인구예측 논문** Fertility, mortality, migration, and population scenarios for 195 countries and territories from 2017 to 2100

2100년 인구 1위는 인도(2017년 13억8000만, 2100년 10억9300만)

**나이지리아**(2017년 2억600만, 2100년 7억9000만)가 **중국 제치고 2위로**

# 선진국들, '국가 단위 규제 → 제품별 규제' 방향 전환

Annex, 또는 NDC형 국가 단위 규제는 'CBDR 원칙' 벗어나기 힘들어

유럽-미국 등 : CBAM CCA 배터리법 에코디자인 기후공시 등 제품별 신 규제  
'국경 해체'의 효과 → 선진국 규제를 개도국까지 보편 확대 적용

- \* "아프리카 가장 큰 타격" :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분석(2023. 12)  
CBAM 6개 품목 시행 시 아프리카 GDP 0.5% 감소(모잠비크는 1.6%)  
모든 수출품 적용되면 GDP 1.12% 감소, 대EU 수출 5.72% 감소

개도국은 '3중 불평등 (Triple Injustice)' 봉착

1. 가장 책임 작은 나라들이
2. 가장 큰 피해 입고
3. 기후변화 대처 과정에서도 불리 조건 강요  
→ 사다리 걷어차기

# 기후윤리학자의 지적

“내가 당장 굶어죽게 된 판인데, 당신들은 나더러 식량 찾아 헤매는 일 중단하고 자기네 집 새는 지붕 고치는 걸 도와달라고 요구하긴가”

“부자 나라들이 국가간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는데, 왜 가난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해결로부터 고개를 돌려, 그들에게는 그다지 시급하지도 않은 (기후)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가”

**Henry Shue**, *Climate Justice: Vulnerability and Protection* (20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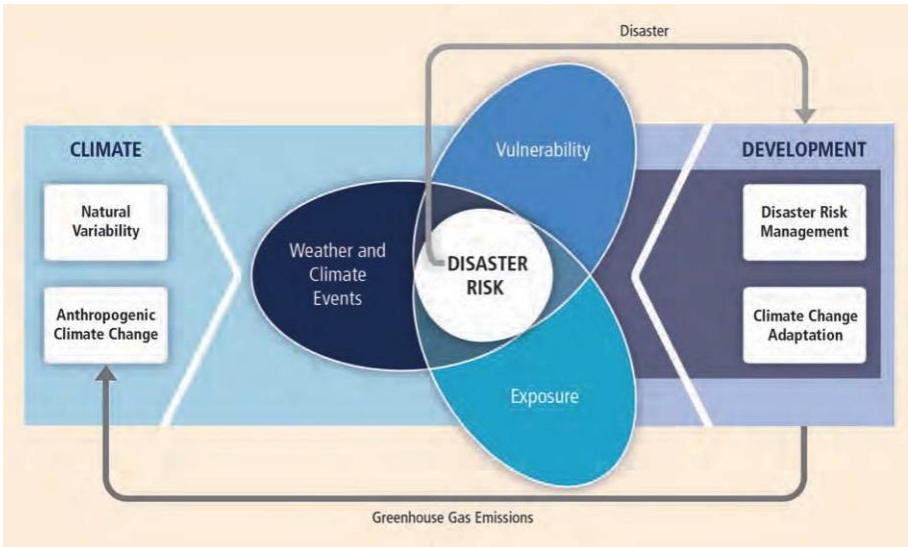
→ 기후변화는 과연 **'existential threat'** 인가의 문제 제기

“기온을 1.5도 또는 2도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만, 설령 1.5도, 2도로 낮추지 못하더라도 1.5도, 2도로 낮춘 미래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”

**Mike Hulme**, *Is it too late (to stop dangerous climate change)?* (2019)



# 기후 피해는 hazard 보다 exposure, vulnerability의 문제



hazard = 홍수, 가뭄 등의 강도  
exposure = 인구, 자산의 위험지대 밀집도  
vulnerability = 예방과 방어 능력

IPCC Special Report on Managing the Risk of  
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 
Adaptation (2012)

“1990~2017 기후재난 피해액 74% 증가(Munich Re)는 거의 exposure 문제  
같은 기간 중 지진-화산 피해는 182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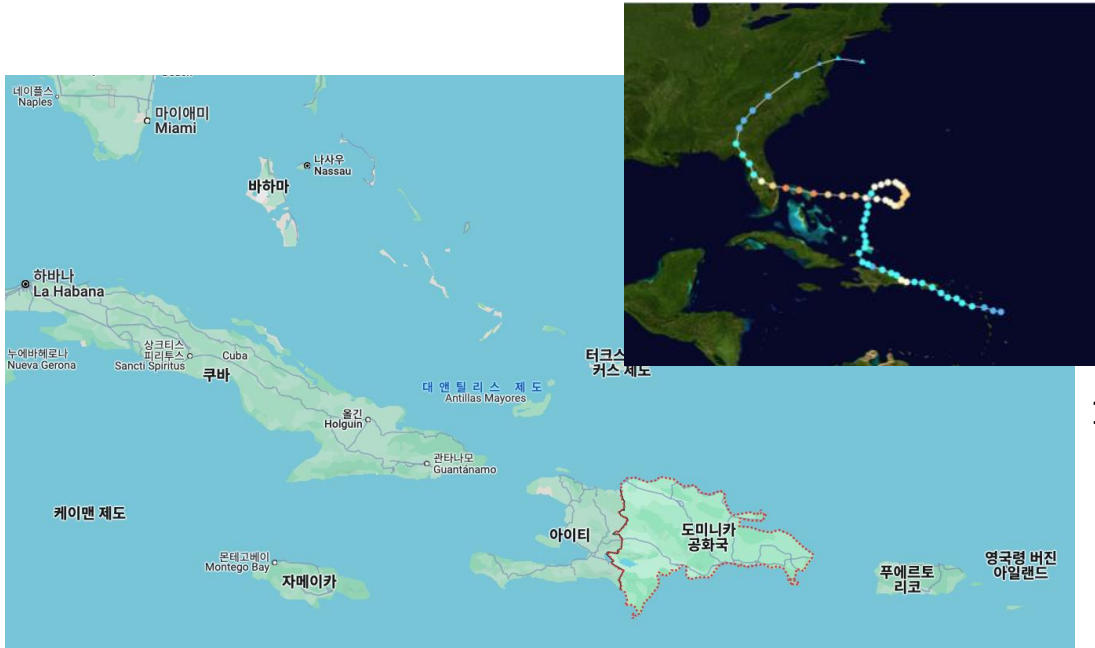
**기후변화 때문이라면 기후 무관 재난(지진-화산)보다 기후 피해 증가가 컸어야 “**

Ted Nordhaus, Did Exxon Make It Rain Today?

**vulnerability는 크게 개선:** 한 차례 홍수 사망자 1950년대 412명 → 2010년대 67명

hazard 큰 변화 없고/ exposure 크게 늘고 / vulnerability 대폭 감소

# 개도국 기후재난 피해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 성장시키고 인프라-제도 구축해야



2004년 9월 허리케인 Jeanne  
1등급으로 도미니카 동쪽 끝 상륙 후  
섬 관통해 아이티 지날 때는  
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

→ 도미니카공화국 18명 사망 / 아이티 3006명 / 미국 5명 사망

도미니카 인구 1100만명, GDP 1만1800달러

아이티 비슷한 인구에 GDP 2100달러

# CBAM 교역 규제가 가진 두 얼굴

## 기후변화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

탄소감축 경로에서 자국 산업 보호, carbon leakage 방지  
개도국 등 후발국들의 탄소감축 동참 자극

한편으론, 기후붕괴 1차 책임국들이 '오염원인자 책임' 원칙을 방기

'국가 단위 규제 → 제품별 규제'로 CBDR 무력화

'level the playing field' 아니라 ' 기울어진 경기장 더 기울여놓기'

CBAM 인증서 판매 수익, 개도국 탈탄소 지원금으로 쓸 수 없나

EU 의회는 2022년 6월 "CBAM 인증서 판매 수익은 Least Developed Countries 의 제조업 분야 탈탄소 노력에 지원" 결정했으나  
→ 회원국들의 확인 과정에서 관련 조항 삭제

코로나 피해 회복 기금(NextGenerationEU)에 넣는다는 방침





